

판사의 과로사: 대만 사법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황이링 OSH Link
번역 : 아시아과로사통신 팀

대만 사법계와 사회에서 판사의 과로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지난 4월 12일 새벽, 38세의 한 형사법원 판사가 기숙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랑한다, 떠나서 미안하다”, “너무 피곤하다”, “업무에 대한 압박이 많다.” 그가 숨지기 전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깊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드러난다. 판사협회는 4월 19일 낮 12시에 전국 법관들이 전국 법원 입구에 흰 꽃을 놓는 ‘화이트 플라워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사망한 판사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사법부에 법관 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너무 피곤하다” 투신 자살한 판사의 메시지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수와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고, 사법 정의와 효율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판사 수는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익명의 한 판사는 언론에서 “주차장을 계속 지어도 국민들의 자동차 구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사법 인력의 증가는 사건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 주차장을 계속 많이 짓는 것보다 자동차 구매 대수를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막대한 소송 건수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사법 개혁의 초점이다.

계속 증가하는 사법 사건으로 장시간 초과 근무가 판사와 사법 노동자의 표준이 되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 2,166명의 판사가 수백만 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전염병 기간 동안 감소했지만 (대만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찰기관이 접수한 일반 또는 특별 형법

과 관련된 사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였다.

판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건 결과에 대한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심지어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또 각각의 사건이 당사자의 생사 및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이 높다. 장기간의 업무 압박과 정신적 부담은 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판사의 과로는 사법 공정성도 훼손한다

판사의 과로는 사법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근무의 압박을 받는 판사는 재판과 판결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당사자의 권리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선광웨이 판사협회 회장도 언론을 통해 “과로한 의료진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과로한 사법부도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은 매우 시급하며, 그 최우선 과제는 판사와 사법노동자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관의 과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 사법원은 4월 17일 검토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의안을 제안했다:

1. 적법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판사에게 합리적인 사건 수를 배정하고, 진행 중인 사건 수가 업무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성과 평가 조치 완화
 - 1) 다양한 수준의 법원에서 사건 기일 시행의 주요 특징을 연구하고, 사건 기일을 적절히 조정한다.
 - 2) 사건 심리 외에 판사의 불필요한 행정 및 심사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현행 성과 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3) 고등법원 및 부속 법원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절차 관리를 위한 시행 지침을 검토하고, 검토실별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
3. 사법권 남용을 억제하고 사법권 남용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자발적 참여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법원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검토 회의에서는 사무관 수와 판사 수 조정, 초과 근무 수당 조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과로사 사태는 사법 시스템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